

광양항 20년 최고 복합물류항만 만든다

김영록 지사, 전남도 동부권 발전 전략 제시

보성 울포해양관광단지·고흥 스마트팜 벨리 조성

전남도가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복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하고 드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하는 등 전남 동부권을 국가 경제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부권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 동부권은 국가 경쟁력의 엔진과도 같은 곳으로 차세대 핵심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면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기반으로 한 관광·농업 등 기존 주력 분야의 심층 발전을 도모하고 차세대 산업으로 부상하는

핵심사업들을 육성,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동부권 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사업들은 ▲차세대 드론산업 선점 가속화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복합물류항만으로 조성 ▲고흥 스마트팜 혁신벨리 조성 ▲구례 친환경 유기농 복합타운 조성 ▲보성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 등이다.

드론산업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15개 사업에 8077억원을 투입하는 3단계 발전 전략을 수립해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드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지역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직경 22km에 달하는 비행시

험 구역이 지정되면서 신제품을 자유롭게 날리며 테스트하고 실증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토대로 1단계(2021년) 기간에는 고흥 비행시범공역과 연계,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는 등 산업 기반과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단계로 오는 2024년까지 산업용 중·대형 드론산업 실증기반을 선점하고 3단계로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 비행체 실증을 비롯한 유·무인기 특화 종합생산단지 조성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업 선점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관련 기업 270개, 고용인원 3400명, 매출이 4000억에 이르게 하겠다는 목표다.

광양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광양항 인근 세풍산단(243만㎡), 황금산단(112만㎡), 울촌2산단(379만㎡) 등을 항만 배후 단지로 전환하고 개발 완료된 세풍산단 1단계 용지를 우선 매입해 부족한 용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울촌 2산단 앞 준설과 항만자동화시설 구축 등 노후화된 항만시설 현대화 계획도 내놓았다.

전남도는 이외 보성 울포해양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휴양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480억원 규모의 관광지 조성 구상인 '스마트팜 혁신벨리', 구례 '친환경 유기농 복합타운' 조성 계획도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 동부권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사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태풍피해 벼 매입 확대 농민 호응

시장 격리 효과 쌀값 인상 견인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내 태풍 피해벼 매입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쌀값 인상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풍 피해벼 매입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격리 효과가 나타나 미질 향상과 함께 쌀값 상승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까지 태풍 피해벼 1만5200t을 매입했다. 매입 등급은 잠정등외A 등급이 98%, 잠정등외B 등급이 2%로 나타났다. 10월 25일 80kg 가마당 18만8476원였던 쌀값은 11월 25일 19만204원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인이 피해벼를 정상벼와 별도로 구매해도 손해가 별로 없다고 판단해 피해벼를 별도로 구매에 나서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피해벼 잠정등외A 등급은 수확기 쌀값 19만원을 가정할 경우 1등 가격(6만5769원)의 77%인 5만569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초 태풍으로 벼 쓰

러짐(도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피해벼 전량 매입과 매입가격 인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에서 잠정등외A는 공공비축미 1등 가격의 77%, 잠정등외B는 64%, 잠정등외C는 51%로 전량 매입하기로 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 가을에 태풍 3개가 잇따라 올라오는 바람에 어느 해보다 농업인의 어려움이 컸는데, 다행히 정부가 피해벼 전량 매입과 함께 매입 가격이 높여줘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벼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는 등 전남쌀 품질 고급화와 함께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비축미 매입도 순조롭게 진행돼 11월 말 현재 10만4400t을 매입해 계획(12만4000t) 대비 84%를 마쳤다. 매입 등급은 특등 19%, 1등 67%, 2등 13%, 3등 2%로 출수기와 등숙기 태풍과 잦은 강우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특등 비율이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반부패방지시스템 인증 획득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이 반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했다.

4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각 팀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안과 부패방지 방침, 목표 등 세부 이행계획을 작성,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ITS인증원으로부터 국제 표준 인증서를 받았다.

이번 국제인증 획득은 부서별 부패 위험요인 사전 파악 및 개선, 징계 양정 기준 강화,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 중심의 내부심사 실시와 경영 검토 등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우원식 원장은 "인증 획득에 안주하지 않고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이 청렴조직 문화로 정착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2019 귀농어·귀촌 어울림대회

일시 : 2019년 12월 4일 (수) 10:40 장소 :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귀농어·귀촌 어울림대회 2019 귀농어·귀촌 어울림대회가 4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 구종근 화순군수, 양동철 전남귀농어귀촌인연합회장, 권용식 농민회광주전남회장, 김농성 여성농업인전남연합회장, 김호영 전남4-H연합회장 등이 '소통과 화합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검, '민간공원 특혜' '공직선거법 위반' 투트랙 수사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건설사 압수수색

시청 공무원 당원모집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광주 민간공원 특혜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투트랙'으로 이번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시청 일부 공무원의 내년 총선 관련 당원모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검찰과 지방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인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A업체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날 21일에도 민간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B

업체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민간공원 2단계 1지구와 2지구 특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선정된 업체의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 광주시, 시 감사위원회, 시의회,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 과정에서 공무원 비밀누설,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정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이 구속기소돼 오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정중제 행정부시장과 운영열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 선거구 출마 예정자였던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장을 돕기 위해 당원을 모집한 뒤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독점 관행 개선 촉구

광주 북구 기대서 의원

광주 북구정부가 "수 십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한 업체와 독점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대서(시진) 광주 북구의원은 4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광주시에서 일선 자치구로 이관된 1988년 이후 북구지역에서는 30년 넘게 특정 A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대서는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이 분리됐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한 업체가 독점 영입하고 있다. 잘못된 독점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북구는 올해 8월 공개입찰로 변경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기존 업체의 '영입구역 보장' 등의 이유를 들어 특정 A업체를 선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일선 자치구의 요구를 광주시가 반대할 경우 북구청은 계속 생활폐기물 처리를 한 업체와 독점 계약을

할 수도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자치체의 고유 업무를 광역단체에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북구청 자체적으로 더욱 투명하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점 계약이 아니라 완전 공개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도민인권증진 문화주간 기념식

전남도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지난 3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 존중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1회 도민인권증진 문화주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장석웅 전라도 교육감,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 이해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 인권센터를 개설해 지역 내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인권에 대한 공동 책임주체라는 인식으로 도민인권증진 문화주간 행사를 마련했다. 도민인권증진 문화주간 행사는 13일까지 계속된다. 인권센터는 도청사 민원동 3층에 들어서 앞으로 도민의 인권 존중문화 확산에 앞장서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